

#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교육부는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 제 실현’을 위해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유아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1. 서론

최근 유아교육 정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금년 3월부터는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 되었다.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유아는 같은 교육 과정을 배우고,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었다. 2011년 5월에 5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이 발표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2012년 1월에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이 발표되어 2013년 3월에 시행되었으니 정책수립과 집행이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는 「유아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유아교육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 유치원 운영위원회 도입 등 그 동안 계획으로만 추진되어 온 유아교육 선진화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사뭇 다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2월에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최근 몇 년간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2009년 12월에 수립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이었

다면, 앞으로 5년간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그 세부 과제인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반영되었다.

이하에서는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의 배경과 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2. 5개년 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교육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2006년에 만 3~5세 유아를 위한 무상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였고, UNESCO는 2011년에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를 개정하여 영유아 교육의 범위와 경계를 확장하였다.

둘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누리과정)과 학비 지원 재원은 통합되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같은 연령의 아이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체제는 여전히 미흡하다.

셋째, 2009년 12월에 수립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세부 과제가 법제화되어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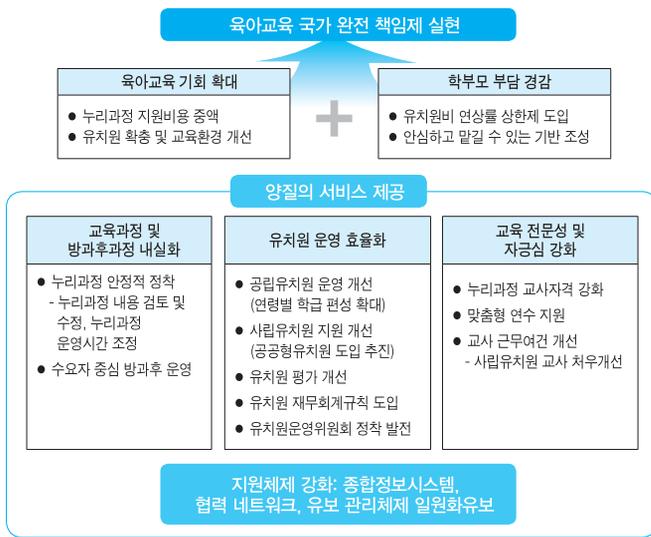
부터는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진화 계획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법」이 개정(2012. 1. 26. 공포, 2012. 4. 27. 시행)되어 교육부장관이 매 5년마다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유아교육 5개년 계획수립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유아교육학계, 공·사립유치원 대표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된 TF에는 총괄 TF와 3개 분과를 두어 각 분과별 팀원과 정책연구진, 담당 공무원 협의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작성된 초안에 대하여 과제 발굴을 위한 교육청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연구진의 초안에 대한 현장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 3.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그림 1]과 같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유아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림 1]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표 1>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분야 및 핵심과제

영역	핵심과제 내용
유아교육 기회 확대	①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②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③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④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정착 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운영 효율화	①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② 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체제 개선 ③ 유치원 평가제도 개선 ④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⑤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착 및 발전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① 누리과정 정체성 명확화 및 질적 발전 ②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체제 강화 ③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 활용 ④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⑤ 방과후과정 전담인력 배치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①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 강화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③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④ 유치원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 ⑤ 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①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②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운영 활성화 ③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 전개 ④ 유아교육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⑤ 유아교육 지원기능 강화

그리고 주요 정책분야와 핵심과제는 <표 1>과 같다. 각 영역별로 세부과제를 선정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유아교육 기회 확대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아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약 4만 6천여 명(9.8%)은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는 예체능학원(27.0%), 영어학원(19.0%), 보습학원(18.7%) 등에 다니고 있으며, 전혀 다니지 않는 경우(4.6%)도 있었다.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보내기 위해(1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어느 기관에도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원비의 추가비용 부담(19.5%)’이었다.

한편, 2012년 4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학부모는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나, 시설 부족으로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5개년 계획에서는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위해 5가지 세부과제를 정하였다.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유아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누리과정 도입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2013년 월 22만원에서 2016년 월 30만원까지 인상하고, 일정 시기에는 무상교육비 지원을 표준유아교육비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유치원 신·증설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아수용계획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한다. 교육감이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시제도를 정착시킨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는 초기 시행 단계로 지금까지는 전국 모든 유치원의 정보공시 참여를 독려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공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요구가 점점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오류 신고센터 설치, 오류정보 검증 프로그램 제공, 유치원 공시자료 입력실태 현장 점검 및 시·도별 모니터링단 구성 등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나. 유치원 운영 효율화

2012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공립유치원 4,522개원 중 병설유치원은 4,355개원(96.3%)이며, 유치원당 평균 학급 수는 단설유치원이 6.2학급, 병설유치원은 1.5학급이었다. 또한 공립 병설유치원에는 혼합반 비율이 높아(46.2%) 연령

별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비가 자율화 되어 있어 지역별·유치원별 원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비 평균은 월 325천원이나, 원비를 가장 많이 받는 유치원은 서울 지역 월 807천원, 가장 적게 받는 유치원은 전남 지역 월 141천원이었다. 이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개인(88.3%)이 운영하고 있으나, 회계 운영에 있어 투명성·책무성 확보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치원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공립유치원 혼합반 문제, 사립유치원비 안정화, 유치원 평가, 사립유치원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을 정하였다. 연령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유치원 학급의 신·증설을 확대하고,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 영역에서는 세 가지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공립유치원을 지역별 수요와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병설 중심의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 유도한다. 또한, 3~5세 연령별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병설유치원을 최소 3학급 체제로 전환하고, 통학지원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둘째,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 표준유아교육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하고, 표준유아교육비에 맞

추여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도입이다. 차입금과 적립금 제도 도입 및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하고, 예·결산 기준을 명시하고 장부와 서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 다.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3~5세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복식학급 운영 모형 발굴·적용,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의 누리과정 이해와 연령별 연계교육 방법에 대한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1일 3~5시간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과 맞물려 있어 교육과정 정상화와 관리감독 문제, 학부모 방과후과정 비용 부담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기본과정의 심화나 편안한 돌봄보다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특별활동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우려가 있고, 연중무휴 운영과 방과후과정의 원아가 늘어남으로 인해 추가 지원 업무에 따른 교원의 업무 과중 및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유아들이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세부과제를 정하였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누리과정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질적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누리과정의 성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국가 수준의 보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다만,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다. 누리과정(5시간)을 중심으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저녁돌봄을 연계한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방과후과정은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운영 형태와 방법 등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 라.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교사의 상이한 자격기준을 정비하고,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사는 초·중등학교 교사와 달리 전문학사·학사자격 소지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의 연수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커서 교원의 직무 역할 및 경력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연수 기관별로 연수 내용의 중복 및 특정 영역에 치중된 경향을 보이

므로, 특화 영역 설정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별로 교원 임용방식이 다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임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교사 자격기준 정비, 교원 맞춤형 연수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영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교직 이수자 및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의 기본 이수 과목을 기본지식과 교과지식으로 구분하여 최소 이수단위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교원 생애주기별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교원의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기관별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대체교사 확대를 위한 인력 확보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 양양을 위해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과제는 유치원비 안정화와 사립유치원 지원체제 개선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 마. 유아교육 지원체제 강화

각종 유아교육 사업별로 임의로 개발·운영 중인 정보화 시스템을 포털 사이트로 연결하는 중

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15개 지역에 운영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의 조직과 인력 규모로는 지역 안에 있는 유아들의 체험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교육은 ‘교육적 기능’ 외에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주체별·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일부지역의 학부모는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누리과정을 몰라서’라고 응답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교육과정 및 학비 지원 재원은 통합되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유아교육·보육간 ‘정책 칸막이’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교육여건 차이가 지속되어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과학분과 토론회와 2월 18일 국정기획조정분과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유아교육·보육 관리체제 일원화는 꼭 가야 될 방향이며, 통합에 따른 국민의 혼란 최소화 및 통합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초기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파급효과가 크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보통합을 거론하였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유아 체험교육 및 유치원간 협력 강화, 유·보 관리체제 일

원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과제를 정하였다.

이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세부과제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유아교육·보육의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4. 결론

지금까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이 수립된 2009년 12월과 2013년 12월을 비교해 보면, 최근 4년간 유아교육 분야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는 강화되었고, 누리과정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되었다. 유치원과 어린

이집에서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대폭 확대되었다.

2013년 12월 현재 우리는 다시 출발선 상에 서 있다. 이번에는 좀 더 거대한 프로젝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2017년에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상태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고, 영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교사들은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음으로써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